

세종재정

2024. 8

2024년 세번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본 정보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최근 중앙부처와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지방재정 연구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이슈 등을 파악하여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보지 개선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여 더 심도 있는 자료 작성 및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I

재정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	05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 특구	09
또다시 엄습하는 세수결손의 공포	12

CHAPTER. II

재정이슈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17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19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21
재정 뉴스	22

CHAPTER. Ⅲ

재정정책

지방재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26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28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30

CHAPTER. Ⅳ

경제동향

정부 경제동향(기획재정부)	34
정부 재정동향(기획재정부)	35
KDI 경제동향(한국개발연구원)	36
지역경제보고서(한국은행)	37
NABO 경제동향(국회예산정책처)	38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39

CHAPTER. Ⅴ

재정통계

주요 경제지표	41
세종시 주요 통계	44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46

I . 재정 분석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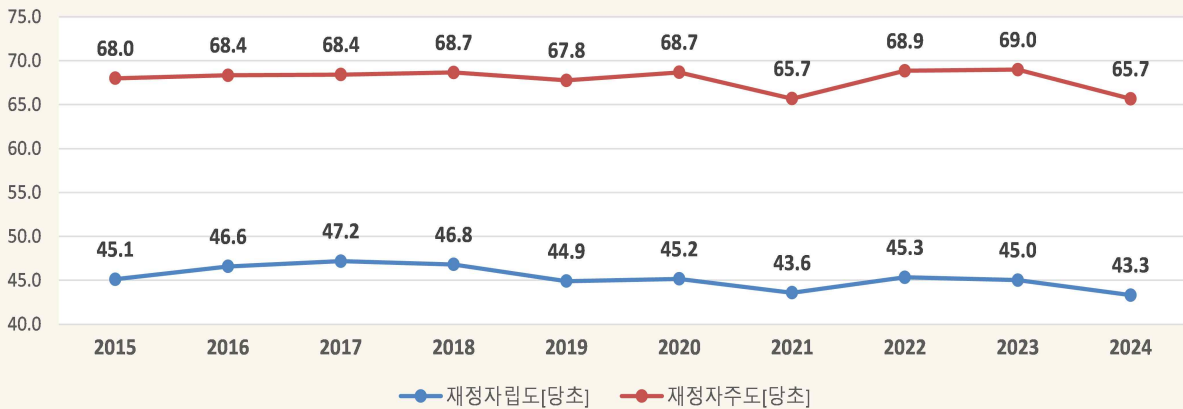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에 대한 논의 시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특징, 한계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
-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 특구]** 세종시가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됨에 따라 교육발전 특구의 주요내용 및 쟁점 등을 살펴보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또다시 엄습하는 세수결손의 공포]** 상반기 세수결손 '10조' 정부발표에 따라 상반기 국세 수입 현황을 분석하고 지방재정의 위기 인식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0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한 착각과 오해

I. 서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난 10년간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한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올해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인 지역은 45개(18.5%)에 이르며,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104개(42.8%)에 달한다고 한다.

(%) 2024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 전북 진안군 6.7%, 경북 영양군 6.8%, 경북 봉화군 6.9%, 전남 고흥군 7.1%, 전남 함평군 7.2%
-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 : 서울본청 76.4%, **세종본청 57.6%**, 경기 성남시 57.2%, 서울 강남구 56.1%, 서울 중구 53.6%
- 재정자주도 낮은 지자체 : 부산 북구 22.8%, 대전 동구 24.8%, 대전 서구 26.3%, 광주 북구 26.4%, 부산 진구 26.7%
- 재정자주도 높은 지자체 : 서울본청 76.8%, 강원 인제군 70.7%, 충남 계룡시 67.1%, 제주본청 67.0%, 강원 정선군 66.6%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재정자주도 또한 그러할까? 재정자주도는 재정자립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경북 영양군의 재정자립도는 6.8%로 최하위에서 2번째이지만, 재정자주도는 64.7%로 상위에서 13번째이다. 경북 봉화군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에서 3번째이나, 재정자주도는 상위에서 9번째이다. 참고로 세종시의 재정자립도는 57.6%로 서울본청 다음 2번째이며, 재정자주도는 65.8%로 상위 8번째이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부자 지자체도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하락하였으나 세종시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0.3%)와 재정자주도(↑2.3%) 모두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세종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며 전년보다 개선되었는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큰 편차는 무엇을 뜻하는가?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재정격차를 잘 나타내고 있는가? 이제부터 상기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우리가 재정지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착각과 오해에 대하여 후술해보고자 한다.

II. 재정분석지표와 재정격차,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방의 재정력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수입 및 지출 측면에서의 재정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인구 규모, 보유자원,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활동, 지방세제, 중앙정부 지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방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지표는 역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라 할 수 있다.

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개념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재원의 조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의 어느 정도를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립도는 지표 값이 클수록 재정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고 건전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수입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재량권이 있는 재원(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 교부금 등 자주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재원의 사용·집행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재정자주도 또한 지표 값이 클수록 재정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전체 수입에서 점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을 보다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추이 및 특징

국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이후 모두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역대 정부들이 지방자치분권과 재정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약 77%와 23%인 현실적인 여건에서 지방재정력 약화와 재정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심각한 불균형은 지방재정을 만성적인 적자로 만들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의존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3)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의 지역간 격차와 지표별 격차

지방자치 행정의 기반이 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가 기본이나, 지역 간 세원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지방세수로 충당하는 재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의 재정자립도(순계)는 74.0%이나 전북은 23.5%로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원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지원하며, 재정자주도는 이를 반영하여 재정자립도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하여 교부되기에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편차가 커지는 구조이다.

III.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한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에 대한 논의 시 기본적으로 제시되고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지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뿐 아니라 이전재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세출측면의 부담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에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추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불완전하다.

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영향 요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지방세 등 자체재원이 증가한다면 이 지표들이 상승하므로 재정력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을 지원하고자 지방교부세 규모를 증가시킨다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고 재정자주도는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은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게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혹은 조정교부금을 증가시킬 때도 발생한다.

국고보조금이 이 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다르다. 중앙정부가 기존에 운영하던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 보조율을 인상하여 보조금 규모를 확대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적인 지출능력은 개선되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모두 하락한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지표들의 하락은 지방자치

단체의 상위정부에 대한 의존성, 특히 특정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더 어려워졌음을 항상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자체재원과 비자체재원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자체재원 감소량이 비자체재원 감소량보다 작아 재정자립도(자주도)가 증가하기도 하며, 자체재원이 증가하더라도 비자체재원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자립도(자주도)가 감소하여 재정력이 약화되었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2) 재정규모와 세출측면의 부담변화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재정격차를 측정함에 있어 사용해야 할 지표는 재정수입 확보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 지출측면의 고려도 필요하나 재정자립도(자주도)는 지출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 또한 중요하나 재정자립도(자주도)는 재정규모에 대한 정보를 담지 못하고 있다. 세종시의 재정자립도(자주도)가 증가한 것은 자체세입보다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현재의 세종시 재정규모는 재정수요 총량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에 시의 실제적인 재정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V.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비자체재원의 증감으로 인해 수치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이 향상·하락하였다는 왜곡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분석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은 주로 재정력 측정에 중점이 두어졌으며 재정자립도 등 단일지표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일지표로는 지방재정 상태를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없어 다양한 지표로 구성된 종합분석이 요구되었고, 지방재정의 상태(건전성)와 재정운영 노력(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개념이 명료하고 산식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기에 재원조달 능력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서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갖는 본질적인 한계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지표를 재정력 판단의 척도로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다양한 재정분석 지표를 통해 재정력과 재정격차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02.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 특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I. 서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2차에서는 세종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 40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곳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본 글에서는 교육발전 특구의 주요내용 및 쟁점 등을 살펴보고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교육발전특구의 의의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여건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을 가장 중심에 두고 지방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교육부문과 타 부문 간의 연계를 유도하여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교육부분에 대한 관심 강화와 교육부문 내에서도 유·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학교급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 지역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재를 양성하여 정주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점

넷째, 각종 교육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 줌으로써 획일적이고 틀에 맞춘 인재 양성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

III. 세종형 교육발전특구 주요 내용

세종형 교육 발전 특구의 목표는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 도시, 세종’ 으로 생애 주기 교육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동반 혁신으로 신(新)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전략은 모두를 위한 교육과 돌봄 연계형 늘봄체제 구축,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체제 혁신, 지산학연 연계 정주형 지역 혁신 인재 양성이다.

첫째, 늘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체제 구축과 온(on-溫)세종 유·보 통합 추진, 유·초·중 연계 이음 교육 과정 등을 통하여 포용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둘째, 공교육 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가칭)캠퍼스고등학교 설립·운영, 모든 학교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온라인 학교를 설립하여 세종형 고교 학점제를 완성할 예정이다.

셋째, 지산학연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운영을 추진하여 특성화고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지원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따라 세종시는 미래전략산업 중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와 연계해 세종 미래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대학과 산업체로 이어지는 진학·취업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고 현장 연계 교육과정도 개발·운영해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에 주력한다.

또 올해부터 입주하는 공동캠퍼스의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관련 창의 인재를 양성해 기회발전특구로 유치된 기업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IV.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쟁점과 한계

교육발전특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의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남발되고 있는 특구 사업의 ‘차별성’ 이다. 국가정책으로 특구의 홍수라고 할 만큼 각종 특구 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만 해도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대전과 함께하는 경제자유구역까지 추진하고 있다. 교육국제화 특구 등 다른 교육특구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관련 규제 완화 요구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과도한 규제 완화로 인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지역 간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지역 내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잠재되어 있다.

아울러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협력을 어떻게 유도하고 끌어내갈지 지역뿐 아니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양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V.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어떠한 교육정책이라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데, 교육정책 제도화의 핵심적인 선결 요건은 법률화와 예산,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이 중요하다. 즉,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충분한 예산확보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함은 물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통해 연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으나 아직 지역별 예산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에서 제안한 다양한 교육규제 완화 요구를 반영한 특례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빠른 법률화와 충분한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첫째 사업 예산의 조기 확정과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차에 선정된 시범 지역과 합하면, 전체 선정 가능 지역 14개 광역 지자체와 173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7개 광역 지자체와 83개 기초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선정 지역이 많은 것은 교육특구선정 사업 취지 자체가 어느 특정 지역에 혜택을 준다는 개념보다도 확산형 특구 개념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역에 혁신을 확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선정, 비선정의 경쟁구도가 아닌 선정 지역들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실행 단계의 보완이 우선이며 이에 정책 유연성을 갖고 실행 단계에서 현장적합도를 끌어올려가는 점이 중요하겠다.

매력적인 교육환경이 있으면 그 교육적 수요를 따라 지방이 활성화되고 살아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및 각 지역 사회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지역인재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

03. 또다시 엄습하는 세수결손의 공포

I. 서론

정부는 7월 31일 '24년 6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하였다. 올해 세수결손이 기정 사실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8월 중간예납까지 실적을 지켜본 뒤 9월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결손이란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세금 수입)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재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예상보다 낮은 세수는 정부 지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만든다.

국세수입 중 내국세의 징수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주요한 재원인 정률 교부세(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국세수입이 예산액보다 적게 징수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내주는 정률 교부세액은 자동으로 축소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와 2024년 교부세 감액 산정에 따라 자체 예산조정 등과 함께 지방채 발행,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사업예산을 확보해야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지 않고 재정압박의 상태가 지속되면서 지자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이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세액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I.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현황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기업실적 저조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얼마나 걸렸는지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6월까지 45.9%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수진도율(51.9%)보다 6.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 5월 국세수입 발표에서 세수진도율이 최근 평균 5년대비 △5%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자 세수결손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24년 6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 (출처:기획재정부)》

세목	구분	'23년 실적	'24년 예산	6월 당월				6월까지 누계				6월 진도율		
				'23년	'24년	증감	(증감율)	'23년	'24년	증감	(증감율)	'23년 ¹⁾	최근5년 ²⁾	'24년
■ 총 국 세		344.1	367.3	18.4	17.5	△0.9	△4.7	178.5	168.6	△100	△5.6	51.9	52.6	45.9
■ 일반 회 계		333.9	356.1	17.6	16.7	△0.9	△5.0	173.6	163.5	△101	△5.8	52.0	52.7	45.9
○ 내 국 세		306.1	321.6	14.6	14.0	△0.6	△4.4	160.5	150.9	△9.6	△6.0	52.4	53.4	46.9
- 소 득 세		115.8	125.8	6.8	6.6	△0.1	△2.1	57.9	58.1	0.2	0.3	50.0	52.0	46.2
- 법 인 세		80.4	77.7	3.1	2.3	△0.7	△24.2	46.7	30.7	△161	△34.4	58.1	57.9	39.5
- 상속증여세		14.6	14.7	1.1	1.0	△0.0	△3.4	7.9	7.9	△0.0	△0.2	54.2	51.6	54.0
- 부가가치세		73.8	81.4	2.2	2.4	0.2	8.7	35.7	41.3	5.6	15.7	48.3	48.8	50.7
- 개별소비세		8.8	10.2	0.6	0.6	0.0	7.4	4.4	4.4	△0.0	△0.9	49.9	49.3	42.8
- 증권거래세		6.1	5.4	0.4	0.4	△0.1	△12.4	3.0	2.7	△0.3	△9.5	49.4	52.6	50.5
- 인 지 세		0.8	0.9	0.1	0.1	0.0	1.8	0.4	0.4	0.0	11.2	48.2	49.7	50.3
- 과년도수입		5.7	5.7	0.4	0.5	0.1	27.1	4.4	5.4	1.0	22.4	78.1	82.9	95.5
○ 교통에너지환경세		10.8	15.3	0.9	0.9	0.1	6.6	5.3	5.3	0.0	0.8	48.9	50.2	34.9
○ 관 세		7.3	8.9	0.5	0.6	0.0	8.9	3.5	3.3	△0.2	△5.7	48.3	50.0	37.3
○ 교 육 세		5.2	6.2	0.2	0.2	0.0	8.3	2.7	2.8	0.1	4.1	51.5	51.0	44.8
○ 종합부동산세		4.6	4.1	1.4	1.0	△0.4	△26.5	1.6	1.2	△0.4	△27.4	35.4	22.6	28.8
■ 특 별 회 계		10.1	11.2	0.8	0.8	0.0	2.8	5.0	5.0	0.1	1.8	48.9	49.9	45.1
○ 주 세		3.6	3.6	0.1	0.1	△0.0	△9.4	1.7	1.6	△0.1	△7.3	48.8	50.1	45.1
○ 농 특 세		6.6	7.6	0.7	0.7	0.0	3.9	3.2	3.4	0.2	6.8	49.0	49.3	45.1

1) '23년 6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4.6%로 금년 6월은 전년 예산대비 진도율보다 +1.3%p

2) 최근 5년 : 최대 및 최소 연도 제외한 절사평균 진도율

앞으로의 세수전망 또한 순탄치 않다.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직전연도 대비로 계산하는 순액법 기준 5년간 4조 3,515억원 수준이다. 기준연도와 비교해 매년 세금이 얼마 늘어나는지 따지는 누적법 기준 세수 감소액은 5년간 18조 3,942억원이다.

올해 들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 말 누계 기준 7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20년(5월 누계 77조 9,000억원 적자)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III.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

세수결손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세금정책 변경, 정부예측 실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법인세의 급감이 지목되고 있다. 5월까지 견힌 법인세수는 28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조 3천억원 적은 수치이며, 이에 따른 5월까지 법인세수 진도율은 36.5%로 최근 5년 평균 54.5%와 비교해볼때 18%나 낮다. 통상 매년 3월에 법인세를 절반 정도 납부하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납부액이 급감한 데다, 4~5월에는 이 기간 법인세를 내는 중소기업들의 납부율마저 평년에 견줘 낮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법인세의 감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고금리 기조로 소비가 위축되어 관련 세수 감소 및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거래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정책은 낙수효과에 따른 경기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민생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이다.

나라살림의 기본인 국세수입 추계 또한 최근 3년간 두자릿수의 세수오차율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과다와 과소를 반복하고 있다.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예측이 재정이 경기를 보장해야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올해처럼 세수가 부족할 때 오히려 세출을 감액해야 하는 등 재정이 오히려 경기의 진폭을 크게 하고 있다.

IV. 세수결손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40% 가량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수입도 줄어든다. 특히 내국세 총액의 19.24%인 보통교부세 규모 감소가 문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동시 감소에 심각한 재정난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단순히 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지자체 재정의 넓은 관행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입의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단기적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한 세입예산 감소액 충당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체납관리를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취득세 위주의 세수고조를 벗어나 다양한 세입원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자체수입의 증대만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기에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대한 재정특례 확대가 필요하며, 보조율과 효과성을 고려한 보조사업의 선택적 확보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재정사업의 재구조화·축소·폐지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하며, 보조사업 정비와 집행 강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등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V. 맺음말

2023년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결산에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했다. 기획재정부는 과다한 불용(지방교부세)을 반영한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재정통계에 혼란을 야기했다.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의 조정을 통해 재정통계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일변도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주면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번 건드리면 변화가 힘든 경직성을 가진 조세제도이다.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감세정책은 신중하고 또 차분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세수 감소 양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 지방재정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핑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전략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종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지방채까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대부분 소진되었지만, 세출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처지이기에 절치부심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재정위기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하여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II. 재정 이슈

요 약

-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하여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근본적인 PF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출 가속 우려되는 투자', '지연되는 내수 반등 시기',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출의 5가지 국내외 경제 이슈를 선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제시
-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경직성 지출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경직성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 **[재정 뉴스]**

01.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FOCUS\(2024.06.20.\)](#)

□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에 의존하여 부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PF는 지난 십수 년간 반복적으로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근본적인 PF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고질적인 부동산PF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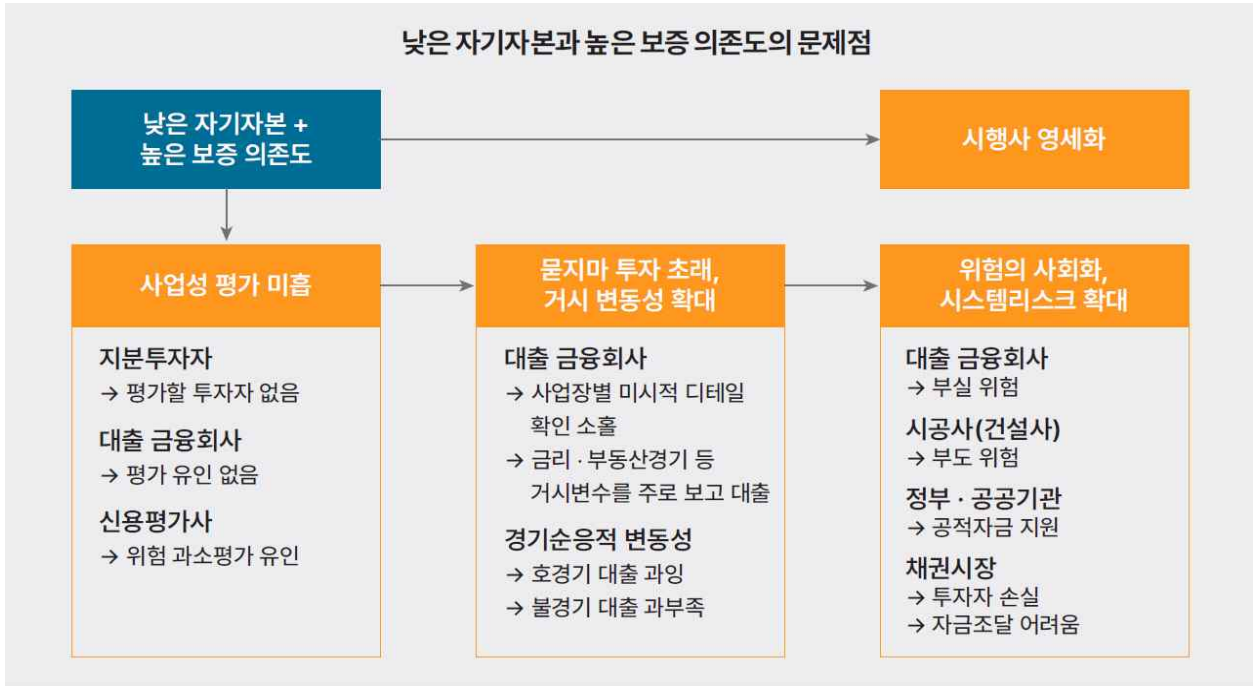
- ▶ 부동산PF(Project Financing)는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 십수 년간 우리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과거 10만명 이상 고객이 손실을 입었던 2011년 저축은행 위기와 2019년 증권사가 PF사업에 제공한 대규모 채무보증 문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지난해 말 태영 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20개 이상의 종합건설사 파산까지 PF 부실이 주요 원인임

○ PF 문제의 원인: 낮은 자기자본과 높은 보증 의존도

- ▶ 부동산PF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체가 극히 적은 자기자본을 투입하고 제3자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총사업비 대부분을 부채로 조달하는 ‘낮은 자기자본’ 과 ‘높은 보증 의존도’ 의 낙후된 채무구조에 있음
- ▶ 사업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극히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사실상 보증하며 책임준공확약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을 준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음
- ▶ 주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30~40% 수준으로 높으며, 시행사가 아닌 제3자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 건설사가 시행사의 채무까지 대신 변제하는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저자본·고보증구조의 문제점

- ▶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며, 사업성 평가 부실과 묻지마 투자, 거시 변동성 확대를 통해 결국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면서 위험을 사업주체가 아닌 국민경제에 전이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왜 우리나라만 기형적인 PF 구조를 갖게 되었나?

- ▶ 선진국에서는 PF 원칙에 맞게 사업성과 재무구조에 기초해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업주체의 자본확충이 대출을 위한 필수조건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PF 도입 당시 시행사 규모는 작고 건설사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던 상황에서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나타났으며, 선분양 관련 제도로 인해 이러한 구조가 강화되었음

○ 중장기 개선방향

- ▶ 부동산PF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를 도입해야 하며, 과도기적으로 자본확충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 정책제언

○ 부동산PF에 따른 하반기 부동산거래의 위축으로 지방세입을 감소시킬것으로 예상

- ▶ 부동산경기와 주택거래 위축, 부동산PF 문제로 준공 지연 등에 따라 지방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주택가격의 하락 폭에 따라 세입의 감소도 커질 수 있음
- ▶ 부실 부동산 PF 여파는 시행사, 건설사, 제2금융권 등 도미노식으로 번져 위험이 전이되고,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결손 등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우리시도 부동산 PF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선제적인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이 필요함

02.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출처·링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969호\(2024.07.12.\)](#)

□ 올해 하반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과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출 가속 우려되는 투자', '지연되는 내수 반등 시기',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출'의 5가지 국내외 경제 이슈를 선정,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 제시

□ 주요내용

① 차별화되는 주요국 통화정책

- ▶ (의미)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이 일제히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던 2022년과 달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이 엇갈리고 있음
- ▶ (내용) 유로존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 미국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등 국가별로 통화정책 방향이 달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확대
- ▶ (시사점) 주요국 간 통화정책의 차별화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달러화 강세 및 고환율에 따른 물가 전가율 상승 등이 우려되는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경제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 ▶ (의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심화, 고조되는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 세계 경제 회복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 (내용)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재불안 현상 야기 가능성도 점차 커지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시사점) 각종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시 국제상품 가격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현상 재현,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 장기화 등의 각종 위험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필요

③ 유출 가속 우려되는 투자

- ▶ (의미) 미중 갈등 등의 영향에 의한 기업의 투자 유출뿐 아니라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경기 회복 지연 및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확대
- ▶ (내용)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의 대규모 격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식을 포함한 해외증권 투자 유출이 가속
- ▶ (시사점) 향후에도 국내 투자의 해외유출이 지속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실물경기 회복 지연과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 약화를 유발할 수 있고, 환율 불안이나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

④ 지연되는 내수 반등 시기

- ▶ (의미) 외수 부문이 개선세를 이어가는 것과 달리 내수 부문, 특히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회복세가 더딘 상황
- ▶ (내용)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동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반등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시사점) 내수와 외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 및 규제 개선, 한국으로의 투자 유인 증대 등을 통해 내수 반등을 꾀해야 함

⑤ 반도체에 의존하는 수출

- ▶ (의미) 수출 회복세가 국내 경기 개선을 견인하고 있으나, 반도체 반등 효과를 제외하면 여전히 회복세가 미흡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
- ▶ (내용) 과거 대비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한 가운데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도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남
- ▶ (시사점) 반도체 경기 흐름에 수출 경기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수출 구조적 측면의 안정적 회복을 위해서는 그 외 품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03 지방재정 지표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경직성 분석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슈페이퍼\(2024.07.\)](#)

□ 인구구조 변화 및 정책 수요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무·경직성 지출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경직성 수준을 분석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재정분석 지표 중 의무지출비율과 가용재원비율 지표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적 여유 수준 및 재정 운영상 특징, 경직성 수준을 파악함
 - ▶ 의무지출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의무지출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가용재원비율은 세출결산액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로서 자치단체의 재정적 사업추진 역량 및 경직성경비 절감 노력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 ▶ 재정지출 경직성은 지역 수요에 맞춘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적 대응의 어려움을 심화시킬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경직성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 경직성 수준에 편차가 있음
 - ▶ 광역, 시, 군 유형의 평균 의무지출비율은 50~60%, 자치구는 평균 80% 수준임
 - ▶ 가용재원비율은 2021년 평균 10.50%에서 2022년 평균 8.57%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군 과 자치구의 유형 평균은 각각 6.19%, 6.32%로 매우 낮은 수준임
- 보조사업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 국도비사업비가 전체 의무지출경비의 약 75%를 차지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의 경직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 ▶ 지방재정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 재설계가 필요함
 -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직성 경비 지출 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04. 재정 뉴스

□ 시민 안전·편의 높아진다 ‘특교세 25억 확보’ [\[세종특별자치시, 2024. 7. 31.\]](#)

○ 상반기 특별교부세 25억 원 확보

- ▶ 용포리 도시계획도로(소로2-30~31호) 개설(4억), 조치원(원도심)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5억),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 사업(4억)을 추진할 계획
- ▶ 정부세종청사 주변 보행환경 편의증진 사업(4억), 첫마을 방음터널 화재 고위험 자체 교체(5억), 영당교·송성교 내진보강(3억) 등을 진행

□ 보다 촘촘한 재정분석과 환류 강화로 지자체 건전재정 관리 지원 [\[행정안전부, 2024. 5. 9.\]](#)

○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중 재정분석 도입 등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추진계획을 마련

- ▶ 그간 재정분석은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여 신속한 정책환류가 어려웠으나 연중 재정분석을 추가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지자체 재정을 분석하고 환류
- ▶ 올해는 현금성복지비율 등 6개 지표를 6월 말 예산 기준으로 분석하고, 지자체에 개선 리포트를 제공하여 지자체 재정관리 개선을 지원

○ 재정분석 우수단체 선정 시 종합점수 분야 외에 개선도 분야를 신설하고 지자체 노력도를 평가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유도

□ 2024년 재산세 약 19만 7천건, 612억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 2024. 7. 14.\]](#)

- ▶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일반건축물 신축으로 지난해보다 28억원(4.7%)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56억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 2024. 6. 16.\]](#)

○ 지난해 동기 대비 10억원 증가, 내달 1일까지 납부

- ▶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1만 3,000여 건, 총 156억 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상반기 차량 등록 대수는 20만대로 지난해 대비 약 2% 늘어나면서 자동차세도 10억 원 증가
- ▶ 과세기간 신규, 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했으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2024. 6. 17.]

- 정부는 '24.6.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8.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
- ▶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된 것이며,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리터당 △164원, 경유 △174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 세부담이 경감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24.6.30.	'24.7.1. ~ 8.31.
		△20%	△30%	△37%	휘발유△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7%	휘발유△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30%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656(△164)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407(△174)
액화석유가스(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142(△61)

□ 지방재정 관계법을 개정 추진 [행정안전부, 2024. 6. 23.]

-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며,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
- ▶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하며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

□ 세종시교육청-세종시청, 교육 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 선정 [\[세종시교육청, 2024.7.30.\]](#)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청이 공동으로 신청한 교육부 주관 ‘교육 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 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종 선정됨
- ▶ 세종형 교육 발전 특구는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 교육 도시, 세종’ 이라는 목표 아래, ‘생애 주기 교육 민관 협력과 지역 맞춤형 동반 혁신으로 신 지방 시대 선도 모델 구축’ 을 목표로 3대 분야 추진 전략을 수립
- * 3대 분야 추진 전략: ①온마을이 함께하는 늘봄 체제 구축, ②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③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 세종시교육청, 5-1생활권 2개교 신설 중앙투자심사 통과 [\[세종시교육청, 2024.8.1.\]](#)

- 교육부가 개최한 정기 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5-1생활권 ^(가칭)합강1초등학교와 ^(가칭)합강중학교 설립 심사 통과
- ▶ 이미 자투심사(‘24.5월)로 확정된 합강1유치원과 함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확정, 현재 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된 총 4개 블록(L1, L9, L12, L13) 1,970세대의 학생들이 적기에 배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III. 재정 정책

요 약

- **[지방재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현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원칙과 의의를 살펴보고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 합리적인 조세 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세·지방재정 측면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내용 및 특징,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와 지방세 감면을 조사한 후,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과제를 제시

01. 지방재정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출처·링크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포럼 통권 제74호\(2024.7.\)](#)

□ **현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원칙과 의의를 살펴보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 **지난 정부에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던 종합부동산세를 현 정부는 세제를 개편하여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
 - ▶ 지난 정부에서 세 번의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여 조정지역과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주택 가격의 상승이 세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간 세액 변동율 상한인 세부담상한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함
 - ▶ 현 정부는 2023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정치권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세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개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교부세

○ 종합부동산세의 조세원칙과 연혁, 현황

-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종합부동산세의 궁극적 목적으로 함
- ▶ 1909년 가옥세를 시초로 경제성장과 함께 자산보유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과다보유세, 1989년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의 누진세율 체계를 대체하는 종합토지세 도입, 2005년 보유세 체계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개편 등 부동산세에 대한 보유세제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조세제도의 변화를 함께하고 있음
- ▶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총 4조 1,951억원으로 개인이 납부하는 세액은 9,885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23.6%에 해당하며, 나머지 76.4%에 해당하는 3조 2,066억원은 법인이 납부함. 과세 대상별로 구분하면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징수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별도합산토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징수액 순임

○ 부동산교부세 배분규칙과 현황

- ▶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징수액 전액을 기반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신설되었으며, 2006년 부동산교부세로 명칭을 변경함
- ▶ 2023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70.4%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나, 수도권에 배분되는 부동산교부세는 24.78%에 불과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재원을 재배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순재정편익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축소·폐지와 지방재정 위기

○ 종합부동산세의 축소·폐지는 과도한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과 주거 안정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예산의 부족분을 부동산교부세로 충당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

- ▶ 종합부동산세는 과도한 부동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나, 실제 주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실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부동산교부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합부동산세 축소·폐지로 인한 세수 부족은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시 부동산교부세 기능을 보완할 정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교부세와 연계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 재정 형평성을 보완하는 제도로, 세제 개편에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전하는 부동산교부세 기능을 보완할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의정활동 참고사항

- ▶ 세종시 부동산교부세 결산액은 2021년 113억원, 2022년 166억원, 2023년 111억원으로 부족한 세수여건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 ▶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세법개정안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에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 이양전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02.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2024.07.25.\)](#)

□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으나,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세법개정 추진 경과

- 정부는 지난 7월 25일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안정 적극 지원, 효율적·합리적인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5개의 법률이 개정대상이며(내국세 12개, 관세 3개),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
 - ▶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에 걸쳐 약 4.4조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상속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임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경제의 역동성 지원	투자고용 지역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기술 등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R&D·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기업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자본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지원 확대
민생 경제 회복	결혼·출산·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세액공제 신설 ▶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서민·중산층 부담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소상공인·중소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 체계 합리화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세원투명성 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OECD 암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납세자 편의제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보 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세수효과

-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43,515억원으로 대부분 상속세 경감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임

합계(억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기타
△43,515	△4,557	△3,678	3,656	△40,565	1,629

□ 세법개정안 관련 동향

-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상당수 감세안이 대기업·고소득자에 혜택이 본격화된 탓에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기업을 소유한 오너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 가까우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 재산가와 '큰손' 투자자에 유리
- 자본시장 정상화·내수 부진 돌파구로 3년째 감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2년 연속 세수결손 흐름을 보이고 있어 '재정 기반' 취약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 연이은 '세수 핑크' 위기에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기대됐지만, 비과세 감면 조치 등 세수 증대 수단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 중국의 내수 부진 장기화를 비롯, 미국 대선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세수와 경기 회복세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세수확보 대책 부재

03.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출처·링크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2024.06.28.\)](#)

□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방세·지방재정 측면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내용 및 특징, 재정지원 제도 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유사 사례와 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과제를 제시

□ 기회발전특구란?

- 202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할 목적으로 지정·운영되는 지역으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음
 -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인과 기업의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인구의 이동을 통해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으로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24년 6월 20일 기준,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의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됨
 -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세제 지원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및 감면 ■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 완화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재산세 감면
재정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부담금 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발전특구 펀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리 용자 상품개발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규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혁신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특례 부여 	
정주여건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지방세 감면의 다양한 국내사례

- ▶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기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지원을 제공함. 즉,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관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제공하고 이 외에도 현금지원, 임대료 감면, 임대 지원 등을 제공함
- ▶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다양한 재정지원을 제공함. 즉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제공함
- ▶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다양한 재정지원을 제공함. 즉,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을 제공함. 이 외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대체초지조성비 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등을 제공함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한 쟁점사항

-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한정적으로 설계되어 있음.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기존의 지방세 감면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민간기업이 취득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감면 업종이 제한되어 있음
- ▶ 지방세 감면 이외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 부족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임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 개선방안

- ▶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수준을 확대해야 할 것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 또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고려하고, 지방세 감면 업종에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농업, 순환 경제 등 친환경 업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 지방세 감면 이외의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의정활동 참고사항

- ▶ 세종시는 7월 1일 미래 첨단 산업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 실현을 비전 삼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나섬. 2026년까지 이전 기업을 통해 3조 70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6만 명 창출 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담음
- ▶ 1차 신청지구는 기술혁신지구(827km²·25만평)와 스마트서비스 실증지구(371km²·11만평), 첨단소재·부품 산업화지구(2893km²·88만평) 등 모두 3개 지구에 걸쳐 6개 단지로 총 4091km²(124만평) 규모임
- ▶ 특구 지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란 한계를 넘어 미래 자족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며, '3대 특구'의 관문 중 1차로 '교육발전특구'는 7월 30일 지정됨. 기회특구 또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중요도가 높음
- ▶ 대전·세종 양 지역은 2025년 상반기 지정 목표를 내 건 만큼 맞춤형 대응을 통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을 발굴해야함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지》



IV. 경제 동향

요 약

- **[정부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정부 재정동향]** 5월말 누계 총수입은 기금수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6조원 증가한 258.2조원, 진도율은 42.2%
- **[KDI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
- **[지역경제보고서]** 2024년 2/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 서비스업은 생산 보합세,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 **[NABO 경제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의 회복세는 더딤
-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2024년 5월중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

01. 정부 경제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6월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 글로벌 경제는 제조업 경기 및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지속
 - ▶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가운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 병행

- **'24.4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및 건설투자는 증가, 소매판매 및 설비투자는 감소**
 - ▶ 생산은 광공업 생산(전월비 2.2%, 전년동월비 6.1%), 건설업 생산(전월비 5.0%, 전년동월비 0.8%),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3%, 전년동월비 2.0%)이 모두 증가하여 쏙산업 생산(전월비 1.1%, 전년동월비 3.1%) 증가
 - ▶ 지출은 건설투자(전월비 5.0%, 전년동월비 0.8%)는 증가, 소매판매(전월비 Δ 1.2%, 전년동월비 Δ 2.6%), 설비투자(전월비 Δ 0.2%, 전년동월비 Δ 2.3%)는 감소
 - ▶ 소비자심리<'24.5월 CSI 98.4(전월대비 Δ 2.3p)>는 하락,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BSI '24.5월 실적 73(전월대비 2p)> 및 전망<전산업 BSI 6월 전망 74(전월대비 1p)>은 모두 상승
 - ▶ '24.4월 경기동행 지수(순환변동치)는 하락,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상승

- **'24.5월 고용은 일시적 요인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물가는 상승폭 둔화**
 - ▶ '24.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0만명 증가,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 '24.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축소('24.4월 2.9% \rightarrow 5월 2.7%),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2.0%,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

- **'24.5월 중 금융시장은 美 고용 호조에 따른 금리인하 기대약화 등으로 환율은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한 반면,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로 국고채 금리는 하락**
 - ▶ '24.4월 중 주택시장은 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02. 정부 재정동향

출처·링크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 **5월 누계 총수입은 기금 수입 증가 등에 따라 258.2조원, 진도율은 42.2%**
 - ▶ (국세수입)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1조원 감소
 -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인상 효과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소득세(0.3조원)증가로 전환,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추세 유지로 부가가치세(5.4조원) 증가,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15.3조원) 감소, 세율인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증권거래세(△0.2조원) 감소, 수입감소 영향으로 관세(△0.2조원) 감소
 - ▶ (세외수입) 5월 누계 세외수입은 13.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조원 증가
 - ▶ (기금수입) 5월 누계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9.7조원 증가한 93.3조원

-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지출 증가로 310.4조원, 진도율은 47.3%**

-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2.3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

- **'24년 5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7.9조원 증가한 1,146.8조원**
 - ▶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54.3조원(발행 81.8조원, 상환 26.5조원), 외평채 잔액 0.6조원 증가, 주택채 잔액은 △1.6조원(발행 5.6조원, 상환 7.2조원) 감소하여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54.3조원 순증

- **'24.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3조원(경쟁입찰 기준 14.5조원)**
 - ▶ 6월 국고채 금리는 ECB의 금리 인하, 美 경기지표 둔화 등 영향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년 말 수준으로 큰 폭 하락
 - ▶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100.1조원, 6월 조달금리는 3.30%로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응찰률은 310%로 전월대비 하락
 - ▶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분기말 대규모 만기상환(△4.1조원)에도 불구하고 만기 후 재투자 등으로 3개월 연속 순유입(+0.1조원)

03. KDI 경제동향

출처·링크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7월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

- ▶ 수출은 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며,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는 가운데 반도체경기 호조세 지속 및 반도체 수출과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 ▶ 다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

- ▶ (경기) 수출 회복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 개선세는 다소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
- ▶ (소비)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다수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나, 해외 소비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
- ▶ (설비투자) 고금리 기조 등에 주로 기인하여 부진한 흐름을 지속
- ▶ (건설투자) 건축부분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어 부진한 모습
- ▶ (수출) IT 품목의 높은 증가세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
- ▶ (노동시장) 서비스업의 둔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건설업도 위축되며 고용 증가세가 완만하게 조정되는 모습
- ▶ (물가) 농산물 수급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물가상승세가 물가 안정 목표에 근접하는 모습
- ▶ (금융시장)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는 유지되는 모습
- ▶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은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신규공급이 축소되며 전월세 가격의 상승폭이 다소 확대
- ▶ (세계경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요인도 상존

04. 지역경제보고서

출처·링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6월호

-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은 생산 보합**
 - ▶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 의약품 등이 소폭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 철강, 전기장비 등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디스플레이는 보합 수준을 보임
 - ▶ 운수업 및 부동산업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감소
-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 ▶ 민간소비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 재화 소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서비스 소비는 소폭 감소
 - ▶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업종별로는 반도체 및 철강이 소폭 증가. 자동차 및 부품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전기장비 등은 전분기와 비슷
 - ▶ 민간부문은 자금조달 여건 악화,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분기 수준의 착공실적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공공부문의 경우 지자체의 SOC 예산 집행액 축소로 소폭 감소함
-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전분기대비 소폭증가**
 - ▶ 반도체, 자동차 및 부품은 소폭 증가하였다. 철강 및 전기장비는 소폭 감소하였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은 보합 수준을 나타냄
- **2/4분기 중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
 - ▶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2만명 늘어나 1/4분기(+1.5만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됨
 - ▶ 지역별로 충남·충북은 증가폭이 확대, 세종은 축소되었으나 대전은 감소폭이 감소
- **주택매매 하락폭 축소 및 전세 가격 하락폭 확대,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 ▶ 4~5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2.8% 상승하여 1/4분기(3.0%)보다 상승폭이 축소
 - ▶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대비 0.09% 하락하며 1/4분기(-0.12%)에 비해 하락폭이 소폭 축소, 전세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06% 하락하며 1/4분기(-0.02%)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
 - ▶ 지역별로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대전 및 세종의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충북은 증가 전환되었고 충남은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전세가격의 경우 충북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대전의 경우 하락전환하였고, 세종은 하락폭이 확대, 충남은 다소 축소 되었음

05. NABO 경제동향

출처·링크 [국회예산정책처, NABO 경제동향 \(제43호\)](#)

-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의 회복세는 더딤**
 - ▶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반도체 수출의 강한 회복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고금리 기조 등으로 소매판매와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내수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음

-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 감소로 부진이 지속**
 - ▶ 소매판매(전월대비, %): ('24.2월) -3.2 → (3월) 1.1 → (4월) -1.2
 - ▶ 내구재(전월대비, %): ('24.2월) -3.0 → (3월) 2.9 → (4월) -5.8

- **4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에서 늘어났으나 기계류에서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감소**
 - ▶ 설비투자(전월대비, %): ('24.2월)9.6 → (3월)-6.3 → (4월)-0.2

- **5월 「무역수지」는 수출의 큰 폭 증가, 수입의 감소로 49.6억달러 흑자로 흑자폭 확대**
 - ▶ 수출(전년동월대비, %): ('24.3월) 3.1 → (4월) 13.8 → (5월) 11.7
 - ▶ 수입(전년동월대비, %): ('24.3월) -12.4 → (4월) 5.4 → (5월) -2.0
 - ▶ 무역수지(억달러): ('24.3월) 42.9 → (4월) 15.3 → (5월) 49.6

- **5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상승**
 -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4.3월)3.1 → (4월)2.9 → (5월)2.7

- **4월 「생산」은 전산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
 - ▶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 전월대비 1.1% 증가
 - ▶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5% 증가, 「서비스업 생산」은 2.0% 증가

- **5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상승**
 - ▶ 5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8.0만명 증가한 2,892만명으로 증가세 둔화, 실업률을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한 3.0%를 기록

- **5월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모두 전월말 대비 소폭 하락**

06. 최근 세종지역 실물경제 동향

출처·링크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2024.7](#)

□ 2024년 5월중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가 일부 개선되는 모습

세종지역 실물경제 관련 지표

		2023년						2024년		
		연간	5월	1/4	2/4	3/4	4/4	1/4 ^{P)}	4월 ^{P)}	5월 ^{P)}
제조업 생산	생산지수	-6.2	-3.2	-8.1	-2.4	-8.6	-5.9	6.5	1.8	-5.0
	출하지수	-2.3	-2.4	-2.2	-1.0	-3.5	-2.4	1.9	2.8	-2.0
	재고지수	8.8	39.1	27.5	45.0	28.9	8.8	6.3	-2.1	-5.1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¹⁾	0.7	0.5	-5.4	2.1	3.6	3.1	6.6	-5.2	4.4
	승용차신규등록대수	6.0	0.6	11.2	5.1	6.5	1.5	-2.0	-8.5	-12.0
투자	자본재수입	36.9	71.3	75.6	64.9	20.5	10.1	9.5	15.6	11.4
	건축착공면적	-56.2	-75.7	-49.8	-70.7	-21.4	-66.6	-33.5	-73.1	171.9
대외거래	수출	-23.0	-33.6	-34.4	-31.7	-23.1	1.1	34.8	8.5	13.5
	수입	-10.8	-11.8	-9.4	-5.2	-19.4	-9.3	28.4	11.7	-16.7
고용	취업자수증감(천명)	10.8	11.3	16.2	12.3	9.5	5.1	1.9	0.6	-0.2
	고용률	64.6	65.8	63.5	65.7	65.2	64.0	63.3	65.2	65.8

주: 1) 매장면적 3천㎡ 이상, 불변지수(2020=100)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국토교통부

- ▶ (제조업 생산) 2024년 5월중 세종지역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은 감소로 전환
- ▶ (소비) 2024년 5월중 세종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전년동월대비)는 증가로 전환
- ▶ (설비·건설투자) 2024년 5월중 세종지역 자본재 수입(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이 축소
- ▶ (수출입) 2024년 5월중 세종지역 수출(전년동월대비)은 증가폭이 확대
- ▶ (고용) 2024년 5월중 세종지역 취업자수(전년동월대비)는 감소로 전환
- ▶ (소비자물가) 2024년 6월중 세종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전월에 비해 하락(24.5월 2.7% → 6월 2.4%)
- ▶ (주택가격) 2024년 5월중 세종지역 주택매매가격(전월대비)은 하락폭이 확대

세종지역 물가 관련 지표

	2023년							2024년				
	연간	5월	6월	1/4	2/4	3/4	4/4	1/4	2/4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¹⁾	3.0	2.6	2.0	4.3	2.6	2.4	2.7	2.8	2.7	2.9	2.7	2.4
주택매매가격 ²⁾	-3.60	0.94	0.79	-7.15	2.40	1.52	-0.12	-2.32	..	-0.84	-0.85	..
주택전세가격 ²⁾	-2.74	0.21	0.37	-7.50	0.82	2.19	2.06	-2.14	..	-0.88	-0.60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전기대비. 단, 분기 및 연간은 전기말월대비 당기말월 기준 /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V. 재정 통계

요 약

- [주요 경제지표] 고용, 생산, 소비, 부동산, 수출입, 금융, 지역특성 통계자료
- [세종시 주요 통계] 기본현황, 재정·경제, 교육·문화,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설·교통, 소방·안전
- [세종시교육청 주요 통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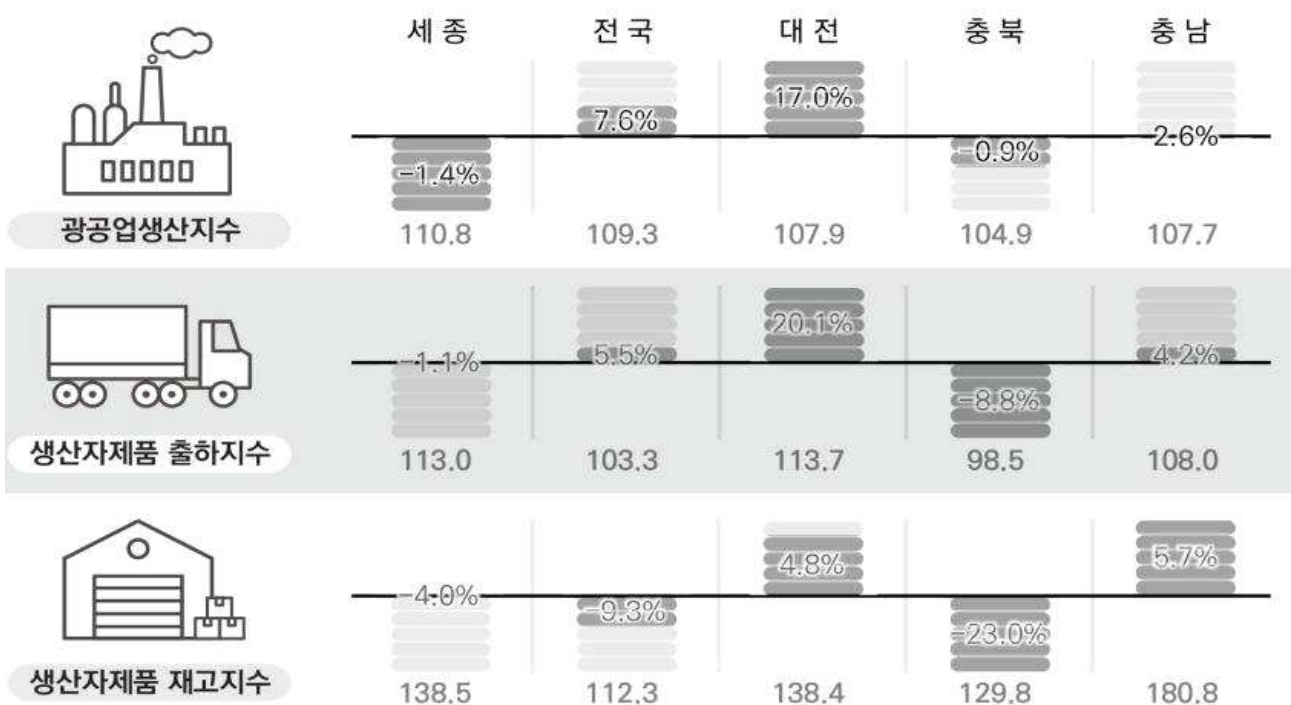
01. 주요 경제지표

출처·링크 대전세종연구원, 월간세종경제 5월호

고 용 | 전년동월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전년동월차(실업률) 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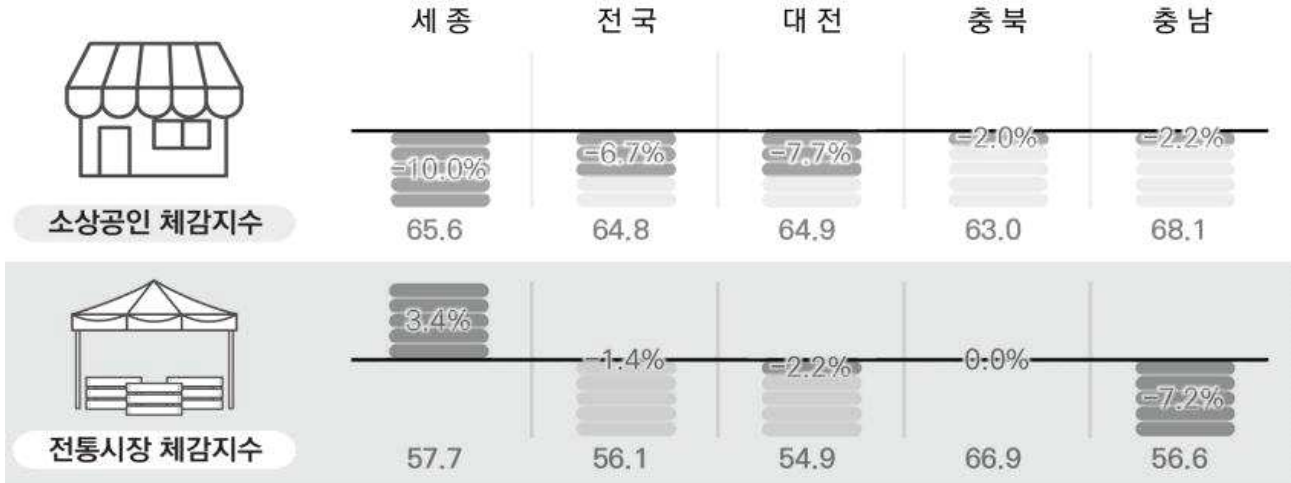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4.



생 산 | 전년동월비/2020=100(광공업), 100(소상공인, 전통시장)

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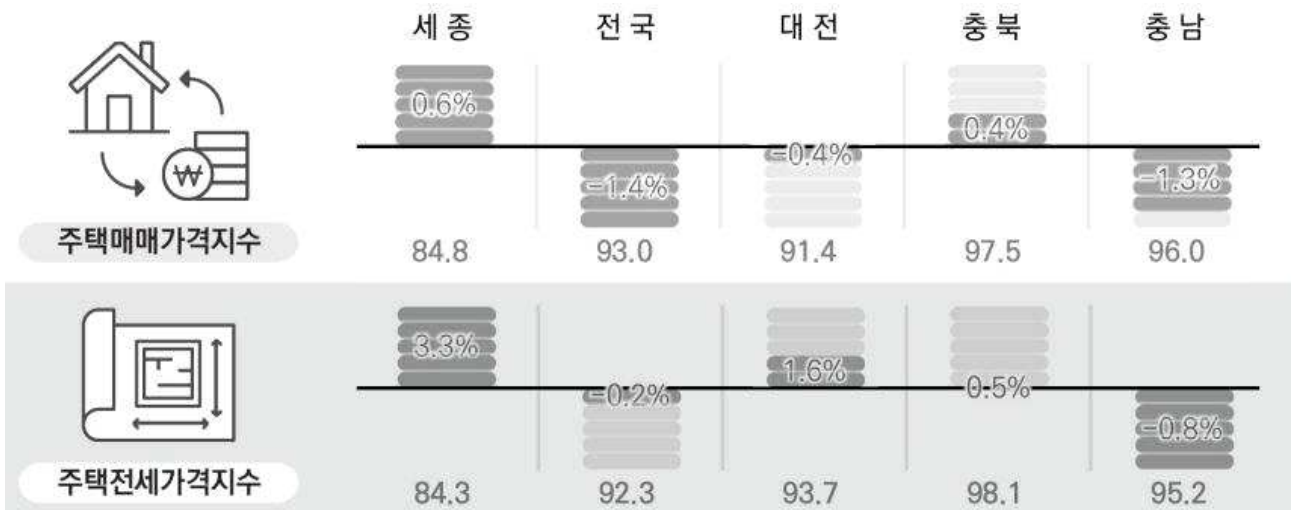
소 비 | 전년동월비/2020=100

24. 4.



부 동 산 | 전년동월비/2022.1=100

24. 4.



수출입 | 전년동월비

24. 4.



금융 | 전년동월비

24. 4.



지역특성 | 전년동월비

2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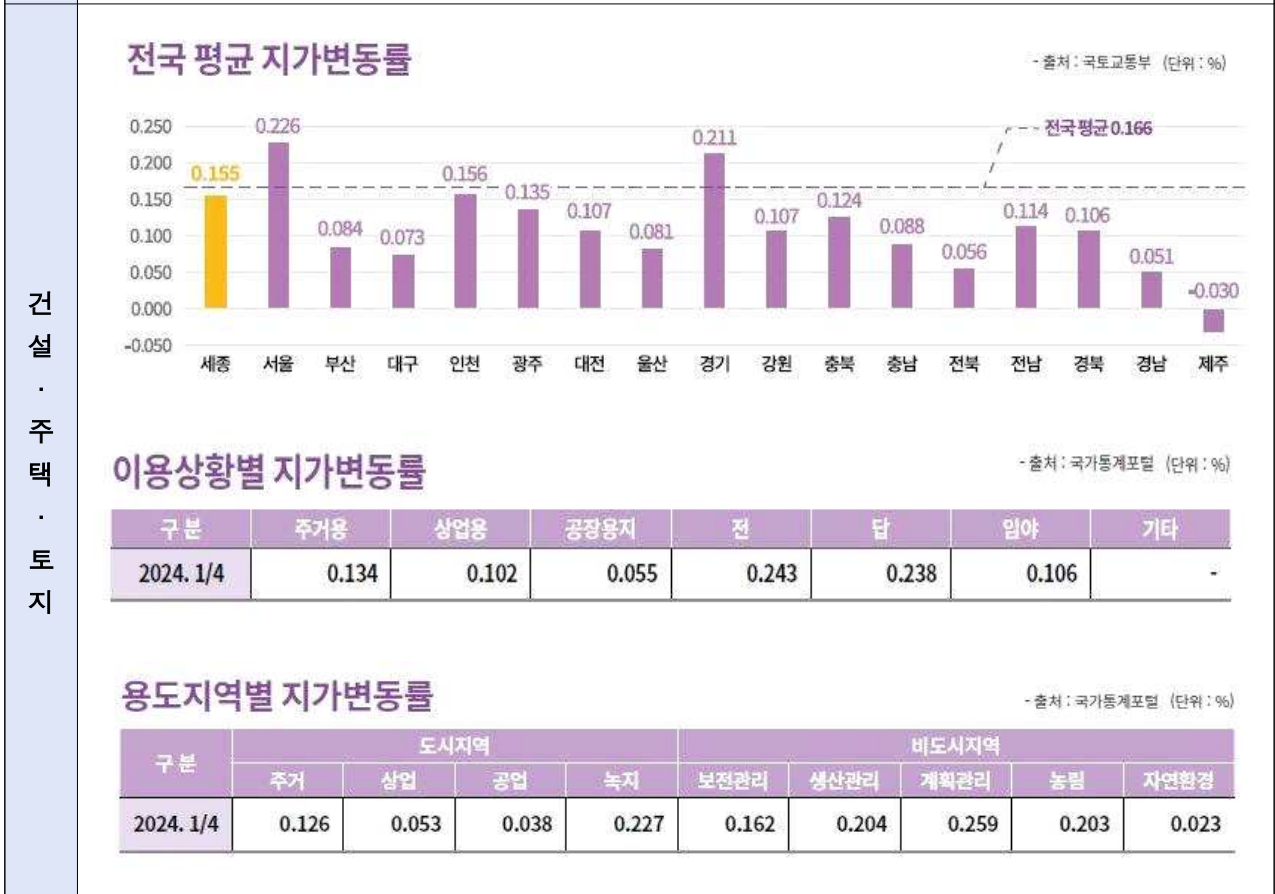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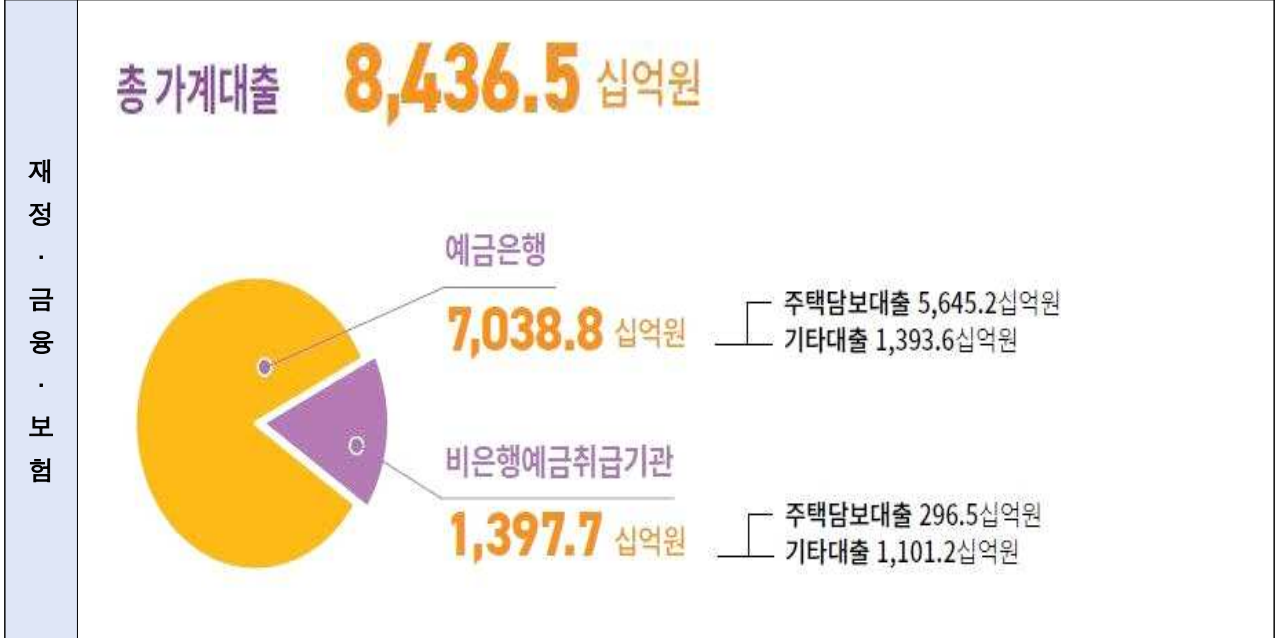
02. 세종시 주요 통계

출처·링크 '24년 1분기 세종통계분기보

2024년 1분기(1월~3월) 기준



고 용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323 천명	209 천명	114 천명	205 천명	4 천명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15-64세 고용률	
	64.7%	63.3%	2.1%	67.6%	



03.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출처·링크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세종교육통계 주요지표](#)

세종시 학교 총 개황

학교급	설립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총계	공립	158	162	165	2,988	3,179	3,309	61,502	64,449	66,354		
	사립	3	3	3	32	31	29	639	682	687		
	계	161	165	168	3,020	3,210	3,338	62,141	65,131	67,041		
유치원	공립	60	62	63	418	433	434	6,474	6,311	6,178		
	사립	2	2	2	8	7	5	126	111	76		
	계	62	64	65	426	440	439	6,600	6,422	6,254		
초등학교	공립	51	52	53	1,472	1,587	1,650	30,726	32,230	32,614		
	계	51	52	53	1,472	1,587	1,650	30,726	32,230	32,614		
중학교	공립	26	27	27	609	643	658	13,822	14,809	15,500		
	계	26	27	27	609	643	658	13,822	14,809	15,500		
고등학교	계	공립	20	20	20	455	481	519	10,305	10,913	11,833	
		사립	1	1	1	24	24	24	513	571	611	
		계	21	21	21	479	505	543	10,818	11,484	12,444	
	일반고	공립	14	14	14	355	375	413	8,407	8,953	9,873	
		사립	1	1	1	24	24	24	513	571	611	
		계	15	15	15	379	399	437	8,920	9,524	10,484	
	특성 화고	직업	공립	2	2	2	30	36	36	495	570	564
			계	2	2	2	30	36	36	495	570	564
	특수 목적고	일반	공립	3	3	3	45	45	45	795	779	788
			계	3	3	3	45	45	45	795	779	788
	자율고	공립	1	1	1	25	25	25	608	611	608	
		계	1	1	1	25	25	25	608	611	608	
특수학교	공립	1	1	2	34	35	48	175	186	229		
	계	1	1	2	34	35	48	175	186	229		

주:학급수는 편성학급 기준임

(단위 : 개교, 개, 명)

교원수			직원수			입학자			졸업자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5,675	6,062	6,320	512	527	536	16,440	17,385	18,087	14,041	15,178	16,443
60	65	60	4	4	4	265	264	231	224	201	200
5,735	6,127	6,380	516	531	540	16,705	17,649	18,318	14,265	15,379	16,643
953	1,020	1,048	98	108	104	2,966	2,842	2,840	2,654	2,757	2,829
11	14	9	-	-	-	67	61	23	48	54	40
964	1,034	1,057	98	108	104	3,033	2,903	2,863	2,702	2,811	2,869
2,268	2,425	2,503	208	207	212	5,091	5,525	5,299	4,871	4,865	5,306
2,268	2,425	2,503	208	207	212	5,091	5,525	5,299	4,871	4,865	5,306
1,254	1,341	1,392	90	98	97	4,910	4,961	5,363	3,666	4,223	4,786
1,254	1,341	1,392	90	98	97	4,910	4,961	5,363	3,666	4,223	4,786
1,135	1,208	1,292	105	103	108	3,432	3,986	4,509	2,818	3,270	3,472
49	51	51	4	4	4	198	203	208	176	147	160
1,184	1,259	1,343	109	107	112	3,630	4,189	4,717	2,994	3,417	3,632
828	901	977	71	71	73	2,771	3,322	3,824	2,242	2,711	2,816
49	51	51	4	4	4	198	203	208	176	147	160
877	952	1,028	75	75	77	2,969	3,525	4,032	2,418	2,858	2,976
85	88	88	14	11	14	192	189	207	106	90	203
85	88	88	14	11	14	192	189	207	106	90	203
162	162	167	16	16	16	270	271	275	264	268	253
162	162	167	16	16	16	270	271	275	264	268	253
60	57	60	4	5	5	199	204	203	206	201	200
60	57	60	4	5	5	199	204	203	206	201	200
65	68	85	11	11	15	41	71	76	32	63	50
65	68	85	11	11	15	41	71	76	32	63	50